

# 무상보육·반값등록금·서민사회보험 시대

## ■ 새해 예산안으로 본 복지혜택

새해 예산안이 1월 새벽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 0~5세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실현 가능해졌다고 새누리당 측은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이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 역시 강력하게 주장해 온 사업이다. 여야가 공동으로 정부를 압박하며 대폭 증액을 이끌어낸 것도 같은 연유에서다.

## 만 0~5세 아이 둔 모든 가정 보육료·양육수당 지급

### 소득 연계 등록금 인하·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영유아 무상보육=여야는 무상보육을 위해 1조4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순수 정부예산은 1조500억원, 행안부 특별교부금 2500억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1000억원 등이다. 예산 확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돌볼 때 각각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보육료는 0~5세 아동에 대해 보육시설 실비 수준인 30만원 안팎에서 지급되며, 양육수당은 전체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아동 연령에 따라 10만~20만원씩 지원된다.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5세에게는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0~5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가 시설에 보내는 아이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아이사랑카드(보육료

바우처)를 신청, 이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가정양육을 원할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계좌로 매달 입금된다. 현재 보육료는 0~2세에 대해,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한정해 0~2세 아동에게만 각각 지원되고 있다.

◇소득하위 70% 반값등록금=정부는 애초 내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2조2500억원을 편성했다. 여야는 여기에 5250억원을 추가해 관련 예산을 2조7750억원으로 늘렸다. 이 예산이면 소득하위 70%에 대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규모라고 예결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면, 명목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절반으로 깎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에 연계해 등록금 인하폭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부모와 학생 본인의 소득을 합쳐 소득 1~2분위(하위 20%) 학생에게는 한해 국·공립대 평균등록금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3~4분위(하위 20~40%)는 70%,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각

각 감면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놀린 만큼, 그에 맞춰 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며 “시립대 역시 450만원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9~10분위(상위 20%)에 대해서 학자금대출(ICL) 자격을 부여하며, 금리는 연 3.9%에서 2.9%로 1%포인트 인하된다.

◇저소득층 사회보장 강화=여야는 우선 월급여가 13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약 14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단계적으로 지원 비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 예산이 올해보다 약 7300억원 늘었다. 노인들니의 경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비 내년 7월부터 ‘부분틀니’에도 적용된다. 군 사병월급은 20% 인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경로당 난방비 부활·쌀 직불금 단가 인상

### 서민 전세자금·예술인 지원금 대폭 늘려

#### ■ 확 바뀐 예산안 무엇이 달라졌다

1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3년 예산안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던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부활했다. 2012년 예산보다 소폭 늘어난 293억원이 난방비 지원 명목으로 들어갔다.

최종증 장애인 급여시간이 1일 3~6시간에 1일 6~12시간으로 확대하는 등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615억원(19%) 증액했다.

농어업인 지원 부문에선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1㏊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농업 직불제 품목도 19개에서 26개로 늘렸다.

일시적으로 경제난을 겪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 예산도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2012년 예산과 비교하면 10배로 확대됐다.

이번 예산의 특징 중 하나는 SOC 예산이 모두 3710억원 증액된 점이다. 늘어난 예산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200억원), 새천년대교(400억원) 등에 추가로 배정됐다.

기존 19세 미만이던 성폭력 피해자 법률조력인 지원 대상을 성인까지로 확대하고 진술 조력인 양성을 위한 3억원을 예산에 새롭게 담았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 대수를 정부안인 3980개에서 4026개로 늘리기도 했다.

사업별 예산은 기존 15%에서 20%로 확정했다.

재정지원 일자리도 늘렸다. 사회서비스와 취약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접 일자리를 정부안보다 1만2000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5000명, 장애인활동지원 5000명, 아이돌봄지

원 2000명 등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삭제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이 난방비 지원 명목으로 들어갔다.

최종증 장애인 급여시간이 1일 3~6시간에 1일 6~12시간으로 확대하는 등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615억원(19%) 증액했다.

농어업인 지원 부문에선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1㏊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농업 직불제 품목도 19개에서 26개로 늘렸다.

일시적으로 경제난을 겪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 예산도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2012년 예산과 비교하면 10배로 확대됐다.

이번 예산의 특징 중 하나는 SOC 예산이 모두 3710억원 증액된 점이다. 늘어난 예산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200억원), 새천년대교(400억원) 등에 추가로 배정됐다.

기존 19세 미만이던 성폭력 피해자 법률조력인 지원 대상을 성인까지로 확대하고 진술 조력인 양성을 위한 3억원을 예산에 새롭게 담았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 대수를 정부안인 3980개에서 4026개로 늘리기도 했다.

사업별 예산은 기존 15%에서 20%로 확정했다.

재정지원 일자리도 늘렸다. 사회서비스와 취약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접 일자리를 정부안보다 1만2000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5000명, 장애인활동지원 5000명, 아이돌봄지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해 넘긴 새해 예산안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가 이번처럼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기는 한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NPL 풀건

- ▶ 실전 비법 배우실 분
- ▶ 1:1 개인 스터디
- ▶ 1인 1물건 추천
- ▶ 평생회비 550만원

## 투자자 모집

- ▶ 투자금 1억원 이상
- ▶ 단독/공동투자 가능
- ▶ 기간 1년정도
- ▶ 고수익 보장

(주)오전경매 H.010-3605-5000

2000명 등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삭제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이 난방비 지원 명목으로 들어갔다.

최종증 장애인 급여시간이 1일 3~6시간에 1일 6~12시간으로 확대하는 등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615억원(19%) 증액했다.

농어업인 지원 부문에선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1㏊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농업 직

제 품목도 19개에서 26개로 늘렸다.

일시적으로 경제난을 겪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 예산도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사업별 예산은 기존 15%에서 20%로 확정

했다.

재정지원 일자리도 늘렸다. 사회서비스와 취약

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접 일자리를 정부안보다 1만2000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5000명, 장애인활동지원 5000명, 아이돌봄지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 복지예산 100조 시대…재정 확충 방안은

### 간접증세 역부족…결국 세율인상 가능성 점쳐

### 재원조달 실패땐 ‘박근혜식 복지’ 실현 불가능

올해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사실상 100조 시대에 들어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국회가 처리한 새해 예산안 342조5000억원 중 복지예산은 97조1000억원이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약 2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또 민간사업을 위탁하고 정부가 금리를 보전해주는 방식의 복지사업 규모 약 5조원을 더하면 실제 복지예산은 100조원을 넘어서선다.

관건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 여부다.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 할 경우 지속 가능한 복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지난 대선 기간 복지대책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내놨지만, 사실상 간접증세 방안으로 평가된다.

주로 과세 대상을 넓히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간접증세안

이어서 복지재원 조달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 증세 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대타협

위 설자 자체가 증세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일부 세율을 높일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한 새해 예산안 박 당선인의 종선·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박근혜 예산 2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예산 증액이 이뤄진 부분은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 학등록금 부담 완화 ▲사병월급 인상 ▲종소기업취업 희망자대비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정가 라운지

### 박지원 “전남도·목포시 예산 2001억 확보”

민주당 박지원(목포) 전 원내대표는 1일 올해 전남도와 목포시 예산 200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40개 사업에 총 1002억원의 목포시 예산을 100% 반영시킨 데 이어 목포 관련 예산 137억원과 전남도 관련 예산 862억원 등 모두 2001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지역 예산의 성공적인 확보에 대해 “산업, 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이 전체적으로 즐었지만 박준영 전남지사, 정종득 목포시장과 힘을 모아 팀플레이를 해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 장병완 “문화전당 예산 1211억 반영”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예산 1100억원,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예산 71억원, CT 연구원 건립 예산 40억원 등이 확정, 통과됨에 따라 문화산업이 광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예산 690억원, CT 연구원 20억원, 콘텐츠 예산

69억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문방위 소속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이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 예산 증액은 물론 마지막까지 현장을 확인하면서 국고 예산에 포함시켰다.

장 의원은 “이제 어느 정도 문화산업을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내현 “동광주~광산IC 공사비 확보”

민주통합당 임내현(광주 북구)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광산IC까지 6차선 확장과 흥용IC 추가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용역비 30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왕복 4차선이 동광주IC에서 광산IC까지 11km 구간은 출퇴근 시간 때 지·정체현상이 반복돼 확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데는 3722억원의 공사비와 7년간의 공기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